

## 보도자료



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

# 발로 뛰는 윤명희 함께 뛰는 새 이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m567h@na.go.kr

[2015. 9. 14(월)]

## 윤명희 국회의원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목재법 시행 2년째. 여전히 목재문화 기반 부족

- 전 국토의 64%가 숲인데 ... 목재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14.7점
-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지특회계로 되어있어, 지자체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 확보 못하면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

#### 2.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비상'

30년간 피해목 100% 제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까지 북상

- 경기도 발생량의 89% 잣나무에서 발병 (이천은 100% 잣나무)
- 소나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방제 매뉴얼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시급

#### 3. 산림조합 여성임원 할당제 법안 시행 이후 여성임원 전년 대비 50% 증가

- 여전히 '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 목표치 달성하기는 역부족

#### 4. 높은 심사비용과 국내 임업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해외 산림인증시스템 의존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 되어야

#### 5. 산림청이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의 수거검사 하지 않아

시중에 '발암물질' 내뿜는 가구 유통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하는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돼

## 목재법 시행 2년째. 여전히 목재문화 기반 부족

- 전 국토의 64%가 숲인데 ... 목재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14.7점
- 이천 목재문화 체험장 예산 배정 문제로 연차적 정상 추진 차질 우려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산림청 국정 감사에서 2014년 목재문화지수 시범 측정 결과, 전국 평균이 14.7점(100점 만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함.
- 이에, 전반적으로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에 비해 목재 이용 기반지표와 활성화 지표가 매우 낮게 나타나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 함.

### <목재문화지수 평가 결과>

전체평균	목재문화 인지도 지표	목재이용 기반 지표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	목재문화지수
14.7점	29.8점	9.6점	4.6점	14.7점

- 목재문화 기반 확대를 위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시에만 반영할 수 있어 지자체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 임.
- 예컨대, 현재 조성중인 이천 목재문화 체험장은 경기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출 사업예산 과다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발생, 이로 인해 연차적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됨.

\* 최종적으로 258백만원이 반영됨 (신청예산의 7%만 반영됨)

- 이에 윤명희의원은 “산림청은 완료시점인 2017년에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조합 5개년 계획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점검할 것”을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함.

##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 확산 '비상'

- 30년간 피해목 100% 제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까지 북상
- 피해가 심각한 광주시와 가장 인접한 이천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함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산림청 국정 감사에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이 1988년 첫 발생 이후 지난 30년간의 방제작업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촉구 함.
- 1988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5년까지 발생빈도가 급증하였다가 2005년 5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시행 2005.8.)된 이후 동법에 따른 예찰·방제 체계 강화로 2010년까지 감소하였고,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였음.
-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으로 고사된 소나무는 2013년에 153만 본으로 2012년 50만 본 대비 약 200%가 급증했고, 2014년에는 191만 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함.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4,559,893본의 고사목 중 4,559,893본 전부를 제거하여 방제율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함.
- 특히, 경기도는 잣나무를 중심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잣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 됨. 특히 경기도 발생량의 89%가 잣나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천의 경우는 100% 잣나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천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 함.
- \* 경기도 내 잣나무 면적(약 42,600ha)이 소나무 면적(약 17,500ha)의 약 2.5배
- 잣나무의 경우 가지가 많고 대경목이 많아 처리비용이 소나무 보다 약 1.5배 정도 많이 필요한데, 소나무 기준의 방제사업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일선 현장에서 작업하는 관련업체들이 방제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주문 함.
-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이니 만큼 지난 30년간의 방제사업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방제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도입할 것은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촉구 함.

**산림조합 여성임원 할당제 법안 시행 이후 여성임원 전년 대비 50% 증가**  
**- 여전히 '여성농어업인 육성 계획' 목표치 달성하기는 역부족**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산림조합 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여성임원 확대 관련 개정된 산림조합법이 2014년 9월 17일 부터 시행되고 있음<sup>1)</sup>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과 수협에 비해서 여성이사와 조합원 수가 극히 적은 상태이고 여성조합원들이 조합경영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지적함.
- 2015년 8월 기준 지역조합의 여성조합원 수는 49,733명으로 전체 조합원 (385,281명)의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이사는 14명으로 전체 이사 851명의 1.7%에 불과함.

<지역조합 여성 조합원 및 이사 현황>

연 도	여성조합원			여성이사					
	전체 (명)	여성 (명)	비율 (%)	전체 (명)	여성 (명)	비율 (%)	전체 조합(개)	선출 조합(개)	비율 (%)
2009년	477,071	58,804	12.3	997	9	0.9	142	9	6.3
2010년	485,414	62,044	12.8	1,016	6	0.6	142	6	4.2
2011년	489,947	63,621	13.0	1,018	6	0.6	142	6	4.2
2012년	492,525	65,594	13.3	1,019	6	0.6	142	6	4.2
2013년	494,080	65,995	13.4	1,017	6	0.6	142	6	4.2
2014년	421,066	56,793	13.5	895	7	0.8	142	7	4.2
2015년 8월	385,281	49,733	13.0	851	14	1.7	142	14	9.9

-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역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생산자 조직의 여성 조합원 및 임원 비율을 2015년까지 조합원 30%, 임원비율 1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산림조합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목표치를 달성하고, 여성조합원이 30% 넘는 조합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임원 할당제' 법안이 정착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1)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은 여성이사 1명 이상 선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 (법률 제12431호, 공포일 2014.3.18, 시행일 2014.9.17)

## 높은 심사비용과 국내 입업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해외 산림인증시스템 의존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도입 되어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한국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자체 산림인증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의 인증심사를 받으려면 많은 비용 지불해야 하고 국내 입업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공통 인증 표준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함.
- 2014년 11월 기준, 세계 80여국에서 국제 산림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38여개 국가에서는 자국의 임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체 산림인증제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해외 산림인증 현황>

(2014년 11월 기준)

구 분	FSC (국제산림인증)	PEFC (자체/국제산림인증)
산림경영(FM)인증 (ha)	183,103,140	264,849,221
임산물생산·유통(CoC)인증(건수)	28,248	10,374

\*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 1993년도에 설립된 국제산림인증기구

\*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1999년도에 설립된 국제산림인증기구로 각 국의 자체 산림인증제도를 상호인정

### <FSC인증 및 한국산림인증 간 산림경영인증 비용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FSC 인증비용	한국형 인증비용
예비심사(초기 1번)	10	7
본심사(5년마다 1번)	26	21
유지심사(1년마다 1번)	13	8
평균(연간)	18	12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산림강국으로서 국제위상 강화는 물론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로 국제무역에서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경쟁력하려면 한국형 산림인증제 도입은 물론 이후 국제산림인증제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해외 산림경영인증과 달리 앞으로 한국산림인증제도를 운영할 때는 숲에서 나오는 제품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인지도를 높이는 등 인증취득활용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함.

## 산림청이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의 수거검사 하지 않아

### 시중에 '발암물질' 내뿜는 가구 유통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하는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돼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산림청 국정 감사에서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된 8개 목재제품 중 방부목재와 목재펠릿 2개를 제외한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도록 한 점을 지적함.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2014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수도권 15개 판매점에서 유통·판매 중인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에 대한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을 시험·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광원목재의 섬유판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4.3배 초과하는 등 4개사 6종의 목재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체에 유해한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이 유통된 것으로 들어남.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치 초과 현황>

(단위: mg/L)

구분	업체명	제품종류	평균값	최대값
파티클보드	태국 바나차이	바탕 15mm	1.64	1.66
섬유판	주식회사 포레스코	바탕 15mm	2.08	2.34
	주식회사 포레스코	바탕 18mm	2.41	2.59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바탕 15mm	3.54	3.92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바탕 18mm	3.84	4.05
	주식회사 광원목재	바탕 18mm	6.50	6.78

출처: 한국임업진흥원

\* 파티클보드 등급기준(KS F3104) E1: 평균값 1.5mg/L 이하, 최대값 2.1mg/L 이하

\* 섬유판 등급기준(KS F3200) E1: 평균값 1.5mg/L 이하, 최대값 2.1mg/L 이하

- 특히, 건축자재 및 생활가구 등으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에는 폼알데하이드가 접착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6.28.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된 이후 2015. 3월까지 단 한 번도 조사한 적 없음.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앞으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된 8개 목재제품이 수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무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저품질의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호 해줄 것”을 촉구함.